

경선부터 치열… 뉴 페이스의 탈환이나, 보수의 수성이나

지방선거 돋보기

① 최대 격전지 서울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3)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총선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여서 민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척도로도 평가된다. 이에 따라 여권에서는 ‘내란 심판’의 완결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을 지원하는 토대를 만드는 계기로, 야권에서는 ‘정권심판·민생심판’을 앞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메트로경제신문>은 총 7회에 걸쳐 전국 17개 시·도지사 선거를 인물, 전략 중심으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지난 8회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린 21대 대선 이후 3개월만에 치러져 17개 시·도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12곳(서울·인천·대전·충북·충남·세종·울산·대구·부산·강원·경북·경남)에서 승리하며 지방권력을 손에 넣었다. 더불어민주당은 5곳(경기·전북·전남·광주·제주)에서만 승리하며 썩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연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조기 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가운데 치러지는 제9회 지선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선거로 변모했다.

◆4년 전 25개 자치구, 426개 모든 동에서 국민의힘 승리

국민의힘은 4년 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압승했다.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장 선거 4선에 도전한 오세훈 당시 국민의힘 후보에게 59.05%의 지지를 보낸 반면, 송영길 민주당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졌던 인천을 떠나 서울시장에 도전했으나 39.23%라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판세는 4년 전과 다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중도층 민심이 상당수 국민의힘에서 이탈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다수 나오는 등 민주당에 훈풍이 부는 분위기여서, 4년 전과 같은 압도적 보수 정당 지지 흐름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與 ‘5+1’·野 ‘오세훈 VS 대항마’ 경선부터 치열

이에 민주당 서울시장 주자들은 서울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마치며 치열한 내부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중진인 김영배(재선)·박주민(3선)·박홍근(4선)·서영교(4선)·전현희(3선)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마쳤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칭찬해 인지도를 높인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출판기념회를 열며 사실상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3연임이자 5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김영배 의원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



서영교 의원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군



정원오 성동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나경원 의원



신동욱 최고의원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국민의힘 후보군

지난 선거서 25개 자치구 등 국힘勝 민주당 중진 잇따라 선거 출사표
대권주자급 자원 오세훈 5선 도전
‘세계 통한 집값 안정화 정책’ 변수

는 당의 중진이자, 중도층에도 호소력이 있는 대권 주자급 자원이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우경화된 상황에서 오 시장은 외연확장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과 절연을 요청한 바 있어 당 지도부와와의 관계 설정도 경선 시 주목할만한 요소다.

국민의힘에서 출마를 시사한 주자는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 외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심 지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나경원 의원·신동욱 최고위원도 거론된다.

◆서울시민 민감한 부동산 이슈, 선거판 흔들까

역대 정부 들어 서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한 정책 변수는 ‘부동산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여부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1·29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태릉CC, 용산국제업무지구 등을 개발해 공공 주도로 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한 반면,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협의회를 열고 서울의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민간 중심의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강벨트를 포함해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료돼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해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 공급으로 집값 상승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실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급은 힘들 것이라고 보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이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화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하나, 지방선거 이후에 집값 오름세가 잡히지 않으면 실제 부동산 규제 혹은 세제 강화 카드를 내놓을 수 있어 유권자의 선택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장동혁,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제안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 노란봉투법 유예 등 친기업 정책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 요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1년 유예 등 친기업 정책을 대거 꺼내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쟁이 아니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알리고, 함께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요청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이 3월 10일 시행된다.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기업은 속수무책이 된다”며 “공장을 늘리거나 생산라인을 변경하는 경영 전략도 노조가 마음만 먹으면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은 수천 개에 달하는 협력업체 노조들과 1년 내내 단체교섭을 해야 할 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미 민주노총 급속노조 소속 하청업체 100여 곳이 법도 시행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기 전에 원청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공공기관 산하 공무직과 용역 근로자 노조에, ‘원청 직접 교섭’ 지침을 내린다고 한다”면서 “이런 마당에 어느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강력한 ‘자사주 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자금 여력과 대응 수단이 부

족한 중소·중견기업들은 경영 불안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 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대표는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상법과 근로기준법도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인하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1%포인트(p) 인하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p로 인상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신기술, 신산업은 창의와 혁신에서 출발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대전환으로, 신산업 기업들이 마음껏 뛰며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오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재경위, 명절 전 ‘대미투자특별법’ 현안질의

업무보고·법안 상정, 간사 간 협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4일 구정 전에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현안질의을 열고 간사 간 법안 상정 여부도 협의하기로 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정태호 재경위 여당 간사, 박수영 재경위 야당 간사,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이자 위원장은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관세 재인상(글을) 올리면서 ‘입법 지연’이라며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는 형국인데, 재경위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26일에 법안이 발의됐고, 숙려기간이 있고, 12월달에 다른 법들을 처리했고, 1월달에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고, 이제 논의를 할 시점이라서 하는 것이고 절대로 국회에서 입법을 지연시킨 것은 없었다”고 했다.

임 위원장은 “책임전가할 사안은 아니다. 지금부터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

해보는 시기”라며 “현안질의, 업무보고, 법안상정을 구정 전에 양당 간사 간 일정을 잡도록 했다. 일정 잡는 것을 협의했으니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는 입장인데, 이 입장이 철회됐냐는 질문에 “특별법은 우리(재경위) 소관이고 비준 동의는 외통위 소관”이라며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에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구윤철 부총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는 질문에 “특별법과 관련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오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위원장은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난 후에는 약간의 변화는 보여진다고 했다”며 “박수영 간사가 ‘그럼 이 법을 하면 25% 재인상 부분이 다시 15%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있냐’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최종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 “차분히, 무엇이 국익인지 고민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